

인터넷 최강국, 정보보호 선진국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약

인터넷의 진화에 따라 우리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 인터넷은 앞으로도 개인 맞춤형, 사물 지능화 등으로 진화를 거듭하여 우리 삶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융합이 산업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어 전력, 교통 등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첨단 융합보안기술로 고부가가치 신규 시장의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터넷, IT의 발전과 더불어 사이버 공격의 특성이 과거 호기심이나 자기 과시적 행태에서 조직적이고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불건전 정보의 유통, 저작권 침해, 명예 훼손, 언어폭력 등 개인과 사회의 피해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융합을 통한 가치 창조적 정책 및 선진 인터넷 기반마련,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등의 전략 목표 달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및 방송통신융합의 가치창조와 진흥이라는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요 중점 추진과제를 정리하였다.

1. 서론

현재 우리사회는 인터넷의 진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향후 All-IP 기반 초광대역융합망, 만물지능통신망 등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으로 진화할 것이다. 이로 인해 다가올 미래사회는 컴퓨팅 능력이 내재화, 지능화 되고 끊임 없는 이동성이 보장되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촘촘히 연결될 전망이다.

인터넷은 또한 인류에게 물리적인 공간과 대별되는 새로운 세계, 즉 사이버 공간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 인터넷은 앞으로도 개인 맞춤형, 사물 지능화 등의 진화를 거듭하여 우리 삶에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융합산업이 산업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력, 교통 등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첨단 융합보안기술이 등장하여 고부가가치 신규 시장의 창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사이버공격의 특성이 과거 호기심이나 자기 과시적 행태에서 조직적이고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과 정유사 등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침해 피해와 같이 웹·바이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업, 개인의 경제적 피해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대규모의 조직적인 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은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도 정보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사이버보안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사이버보안 정책관을 신설하였으며, 유럽연합은 산학연간 긴밀한 협력 중심의 안전한 정보사회 구현 전

락을 추진 중이다.[1] 그리고 일본의 경우, 정보보호의 기능 강화와 민관 협력모델 구축 등을 통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선진국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

한편 인터넷 이용 확산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인터넷 이용자가 소극적 정보수용자에서 적극적인 정보생산자와 유통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불건전 정보의 유통, 저작권 침해, 명예 훼손, 언어폭력 등 개인과 사회의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1999년부터 안전한 인터넷환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획(Safer Internet Programme)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융합을 통한 가치창조적 정책 및 선진 인터넷 기반마련,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등의 전략 목표 달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및 방송통신융합의 가치창조와 진흥이라는 미션을 완수하기 위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요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볼 것이다.

II. 인터넷 기술 고도화를 통한 역량 강화

1. 한국형 미래인터넷(FI-Korea) 추진

인터넷은 지난 30년을 대표하는 30개의 혁신 중 1위를 차지한 만큼 우리 생활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변화를 선도했다.[3]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인터넷 기반 구조 고도화와 미래 기술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미래인터넷 기술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인 GENI(Global Environment for Network Innovations) 구축과 지원에 2013년까지 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2015년 이후의 미래 네

트워크를 설계하는 FIND(Future INternet Design)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래 네트워크 사회 건설”을 위해 기술개발 이외에 산업과 문화, 그리고 규제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사업에 2013년까지 7.7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은 “2030년 10배 빠른 인터넷(10Gbps)” 추진을 목표로 신세대 통신망(NwGN : New Generation Network) 구축을 추진 중이며, 2011년까지 3백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펼쳐질 미래인터넷(FI: Future Internet)은 현재 인터넷 구조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완벽한 정보보호, 전송품질의 보장 및 이동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 네트워크로 진화할 것이다. 즉, 통신, 방송, 컴퓨팅, 센서망이 모두 융합되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끊임없이(Seamless)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될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인터넷에 기반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 인터넷 발전방향과 전망을 위한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미래사회 예측, 정책 및 기술 수요조사 등을 통해 미래 인터넷과 관련된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미래인터넷의 사회적 공론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래인터넷 구현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립하고, 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 정책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인터넷 중장기 기본계획을 2010년 중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미래인터넷 추진전담기관 역할을 담당하여 사업 분야 별 시너지 창출 등을 통해 선진인터넷 사회 구현과 균형 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미래인터넷 환경을 시범적으로 구현하고 미래 기술의 적용가능성, 안전성 등에 대한 시험과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가칭)미래인터넷존 설치 등 미래인터넷 체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 민간분야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

민간분야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최근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DDoS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DDoS 대응 시범서비스를 확

01_ 1위 인터넷, 2위 컴퓨터, 3위 휴대폰, 4위 이메일, 5위 인간게능지도, 6위 자기공명영상(MRI검사), 10위 로봇 수술 등 대부분이 인터넷, IT와 관련됨

대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상의 악성트래픽을 조기에 탐지하여 이를 정화하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DDoS 공격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이를 피할 수 있는 DDoS 긴급 대피소(ERS: Emergency Rescue Service)를 운영할 것이다.

또한 2009년 8월 현재 약 15만개에 이르는 국내 홈페이지에 대한 악성코드 은닉여부 일일 점검을 향후 대폭 확대하여 홈페이지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발 과정에서 해킹 원인을 제거한 후 서비스가 되도록 홈페이지 상시 보안성 강화체계를 수립할 것이다.

한편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 PC는 인터넷 접속 전에 치료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건소(전용백신 보급 사이트)로 자동 접속되는 선제적 예방 차원의 사이버 검역체계를 도입할 것이다. 침해사고 발생 시 홈페이지 DDoS 공격 등을 유발하는 악성코드를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전용백신 개발 및 보급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보 단계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보발생 시 실효성 있는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집중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신속한 추가인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매트릭스 형태의 조직을 운영하고, 직무순환과 교육 등을 통해 대응 전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아울러 백신·보안 등 민간업체와 실시간 분석 정보 공유체계를 수립할 것이다.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침해사고 관제를 네트워크 중심에서 이용자 PC 및 홈페이지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증설 및 공간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상황관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악성코드, 취약점, 해킹 원인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이력조사와 비교분석을 위한 침해사고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침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체계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실시간 정보공유 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유관기관 CEO 수준의 “침해사고 정보공유 협의체”를 운영하며, 인터넷포털과 TV 등을 통해 대국민 정보보호 예보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침해사고와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면,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사이

버 안전콜 118」 신고전화를 통해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도모할 것이다.

3. IT 융합산업 시대의 정보보호 고도화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신규 u-IT 융합서비스의 선제적 보안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VoIP, IPTV, 클라우드 서비스 등 융합서비스의 원활한 확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규 융합서비스 보호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임진강 사고와 같이 댐, 발전소, 항공관제 등 대규모 인명피해와 연결되는 국가 주요시스템의 보호와 침해 방지를 위한 융합보안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을 위해 융합산업에서 보안제품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위주의 현 보안시장 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인 융합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융합산업에 대한 보안투자 장려, 융합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 개편 등 융합기술 정보보호의 인프라를 재정비할 것이다. 그리고 맞춤형 보안전문가 배출을 위해 융합서비스 내재형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 융합형 연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규 정보보호 시장과 융합기술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나갈 것이다.

IT 융합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보안성 강화를 위해 IT 침해사고가 국가안보저해와 직결되는 발전소, 에너지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보호 안전진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실시할 것이다. 특히, 향후 전력과 통신이 융합된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환경에서 대규모 정전사태 등 사회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친환경 융합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인식제고를 위해서 이동성, 개방성 등 융합 환경을 고려한 신규 경량 IT 보안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조선, 자동차 등 주요 국가 전략산업에 적용할 것이다. 산업에 적용된 기존 IT 기술을 그린 IT 보안기술로 대체함으로써 자원소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T 기반 친환경 융합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에코마일리지(Eco-Mileage)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 서비스에 대한 이용가이드를 보급하여 제공할 것이다.

한편 보다 실효성 있는 정보보호 정책 추진을 위해서 NEI 보안(Nudge, Embedded, Invisible Security)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Nudge Security는 ‘팔꿈치로 쿡쿡 찌르는’ 것과 같이 명령, 강압과 억지가 아니라 부드러운 힘으로 이용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보안신뢰성 제고를 위한 이용자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Embedded Security는 IT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함으로써 개발 이후 보안기능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그리고 Invisible Security를 통해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보안 위협수준에 적합한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인터넷 문화 선진화

1. 인터넷 윤리운동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윤리 교육 확산을 위해 창의적인 표현을 보장하면서 인터넷에서 지켜야 할 예절, 타인 콘텐츠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등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2009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약 4,000여명에게 인터넷윤리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2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약 15,000명의 학생에게 인터넷미디어 및 윤리교육을 시행하였다.

한편 인터넷 윤리교육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일선학교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를 개최하고 3년 간 1,000여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이다.

또한 건전한 인터넷콘텐츠 확산을 위해 인터넷미디어대전을 추진할 예정인데,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에 앞장선 UCC, 블로그, 카페 등을 공모하여 시상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미디어의 순기능을 널리 알려 인터넷이용문화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편 자율적인 인터넷 문화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로 인터넷이 인간에 미치는 순기능과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인터넷이 유·청소년 등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순기능적 인터넷서비스 효과를 측정하

여 바람직한 인터넷 정책 제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6세 이전 영·유아층,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형태를 분석하여 사회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윤리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정량화하기 위한 자가진단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콘텐츠 동일성 식별 시스템, 불법유해 정보 판별 DB를 구축하여 P2P 사이트를 대상으로 보급할 것이다.

선진적인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서 민간단체 학술행사, 세미나와 모범적인 인터넷 윤리캠페인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학술단체,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 윤리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을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지원하고, 단계별 계획을 설정하여 인터넷 윤리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2.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근성 개선, 교육 및 문화운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비전 및 정책방향 자문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유관 기관 간에 역할 조율과 사업공조 등을 통해 최대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도록 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 대국민 인터넷 문화 확산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의 확산을 위해 인터넷 관련 퀴즈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인터넷 퀴즈세상(가칭)’ 프로그램 방영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인터넷의 역사, 상식, 신기술, 보안문제, 실명제, 댓글문화 등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퀴즈형식으로 진행하여 인터넷 관련 지식을 전달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단위 초·중·고 학생 중심으로 ‘인터넷 소년단(가칭)’을 양성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및 선플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포털 및 각 지역, 학교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의 ‘악성’ 댓글을 자발적

으로 '선플'로 유도하는 '인터넷 예의지국'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IV. 선진 법제도 기반조성

1.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최근 발생한 DDoS 공격을 통해 약 3천만대에 이르는 이용자 PC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전체 정보통신망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망'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이용자 컴퓨터의 보안강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관련 입법 내용에는 컴퓨터 보안프로그램의 보급 확산, 악성프로그램의 신속한 제거 및 확산방지, 침해사고 대응체계의 강화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용자 PC의 악성프로그램 삭제조치, 접속경로 임시차단 등에 대해 ISP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정부나 ISP가 보안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자의 부담이 적고 이용자 권리 침해가 없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다.

2. 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수행기관 개선

현재 방송발전기금 사업수행기관의 설립목적과 사업간 불일치로 인한 지적이 제기되고, 향후 기금 운영위탁기관의 신규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진흥사업과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도 방송발전기금의 규모는 39개 사업에 1,720억 원에 달하며, 운영주체는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위탁관리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수행하고 있다. 향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일부와 통합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하여 2011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해외한국어방송지원, 조사연구 사업 등은 설립목적과 사업범주의 연관성이 높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는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총괄하고, 인터넷

과 정보보호 등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유목적과 관련된 부분은 특화하여 관리기능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V. 방송통신·인터넷의 국제화

1.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사업 고도화

글로벌 미디어 산업 경쟁이 격화되고 방송통신 융·복합 추세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 진출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우리 인터넷과 방송통신 신기술(WiBro, IPTV 등)의 해외 진출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주요 거점국가에 대한 교류 및 협력 사업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표준을 확산시키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고위급 회담 개최, 개도국 방송통신 전문가 초청 연수, 개도국 방송장비 지원 사업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시장 다변화 및 개척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WiBro, IPTV, 방송 콘텐츠, DMB 등 전략품목의 해외 로드쇼 및 쇼케이스 등을 현지 국가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현지 국가와의 방송콘텐츠 공동 제작을 지원하여 콘텐츠 시장 다변화와 기업의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거점 및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 정책 및 동향, 기업 활동 등의 정보를 기업과 정부에 제공하여 해외 시장개척을 지원할 것이다.

방송통신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남아공 월드컵 등 국제행사 시 홍보관을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방송통신의 글로벌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주요 언어로 우리 방송통신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방송통신과 인터넷 관련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 홍보와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가 보유한 표준을 세계화함으로써 기업 진출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정부부처 및 산하기

관 간 공조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중복성을 지양하고, 민간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KISA내 해외 진출사업을 체계화하고 일원화하여 해외사업의 효율화와 통합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것이다.

2.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추진

2009년도 남북 협력 사업으로 “남북한 방송통신 S/W 개발 워크숍” 및 “국제 학술대회”, “남북한 공동협력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당국 간 공식적인 화해·협력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남북 협력과 정부지원 행사 등이 무기한 보류 중이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방송통신 분야 남북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적 제약이 적고, 북한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지닌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은 낙후하지만, 정보기술을 최우선 분야로 강조하면서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66명의 인력을 위탁하여 교육한 경험이 있다.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북한 우수인력 수급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 공동 연구 및 개발 사업 추진 등을 통한 교류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 공동제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인터넷과 방송을 통한 협력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당국 간 분위기가 조성되면 계획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관계 개선을 고려한 협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3. 「한글.한글」 도메인 도입 추진

현재 한글 최상위도메인(「한글.한글」)의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며,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관) 정책 수립에 참여해오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다국어도메인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반 이용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ICANN 정례회의 보고회를 연 3회 개최한 바 있다.

「한글.한글」 도메인 도입을 통해 완전한 형태의 한글 도메인이 이용됨으로써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국가도메인(.kr) 외에 한글 국가도메인(가칭 「.한국」)을 추가로 도입하여 국가 인터넷주소 자원을 확대하고 이용자 측면에서 도메인 선택의 폭을 확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국어 국가도메인을 우선 도입하는 국가 대열에 동참함으로써 인터넷 선진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 론

향후 빠르게 진화하는 인터넷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형 미래인터넷 프로젝트 추진과 민간분야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 그리고 IT 융합산업 시대의 정보보호 고도화 등 인터넷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윤리운동 전개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그리고 대국민 인터넷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를 선진화할 것이다.

또한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방송발전기금 관리와 수행 개선 등 관련 법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할 것이다. 그리고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고도화하고, 「한글.한글」 도메인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방송통신과 인터넷의 국제화를 도모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환경을 바탕으로 「IT 강국, 인터넷 강국」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세계 일류의 인터넷 문화와 산업을 가꾸고 인터넷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해야만 한다.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변화의 중심에서 이를 선도해 나아갈 것이다.



- [1] EU 정보사회미디어이사회, A Strategy for a Secure Information Society (2006)
- [2] 일본 내각관방 “Secure Japan 2008” (2008), 경제산업성 “글로벌 정보보호 전략” (2007)?
- [3] “A World Transformed: What Are the Top 30 Innovations of the Last 30 Years?” ,

Knowledge@Wharton, 2009. 2.

<http://knowledge.wharton.upenn.edu/article.cfm?articleid=2163>

- [4] “정보보호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8. 12.

약 력



김희정

1994년 연세대학교 정치학 학사
1998년 연세대학교 정치학 석사
2002년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2004년 ~ 2008년 제17대 국회의원
2007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2008년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빙교수
2008년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사이언스 아카데미 명예학장
2009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초대원장
관심분야 : 인터넷 진흥, 정보보호 정책

